

## ☑️ 광주교육 청렴소식

### ▼ 제6회 비대면 빛가람 청렴문화제 청렴캠페인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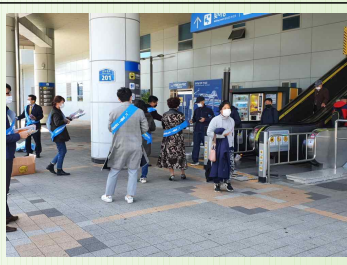
광주·전남 공공기관 직원 및 사·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비대면 청렴문화제 청렴캠페인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

#### □ 개요

- 일시: 2020.10.23.(금) 14:00~16:00
- 장소: 광주송정역 광장
- 대상: 일반시민 등
- 참여: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14개 기관·단체 23명
- 내용
  - 공공재정환수법, 부패·공익신고 등 홍보와 함께 청렴문구가 쓰여진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, 핫팩, 물티슈 증정
- 활동 사진



청렴 홍보물 내역



청렴 홍보물 배부



청렴 홍보물 배부



참여자 청렴 결의

### ▼ 2020년 청렴사회협약 이행과제 평가 결과 보고

2020년 광주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사회협약 이행과제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.

#### □ 설문조사 개요

- 설문기간: 2020. 8. 31. ~ 9. 4. (5일간)
- 설문방법: 설문지에 의한 조사(5개 구청 배부)
- 설문참여: 301명(시민 99, 공무원 133, 기타 69)
- 설문내용: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

#### □ 전문가 평가 개요

- 평가기간: 2020. 9. 15. ~ 9. 17.(3일간)
- 평가과제: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
- 평가방법: 서면평가 \*코로나 19 적극 대응
- 구성현황: 외부전문가 포함 5인
- 평가항목: 자원투입 적정성, 정책추진 노력도 등 4개
- 평가문항: 15개 문항, 5점 척도

#### □ 설문조사 결과

- 이행과제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
-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홍보가 어려워 추후 비대면 홍보 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의 보완 필요

#### □ 전문가 평가 결과

- 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 홍보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함.
- 기관별 홈페이지, 청사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만족도와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.
- 민간기관(단체)의 경우 비대면 홍보를 위한 기반 구축(홈페이지, 홍보영상 모니터 송출 등)미비로 공공기관 위주의 홍보활동에 치중된 점은 향후 보완 필요

### ▼ 익명신고시스템,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세상을 만듭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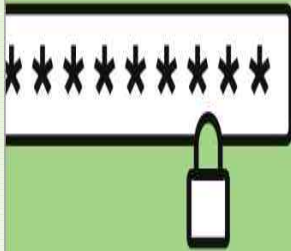
- ☑️ 신고방법: [www.kbei.org](http://www.kbei.org) 접속 / QR 코드 스캔 / 스마트폰 '광주광역시교육청 케이휘슬' 앱 다운로드 후 신고
- ☑️ 신고대상 행위: 공금 횡령, 유용, 금품 향응 수수, 알선 청탁, 이권개입, 직권남용, 부당한 예산 집행, 예산 낭비 행위 등

\*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해 접수되어 IP 추적 방지 등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.





## 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(‘20.11.20.시행)



##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,

# 권익 길라잡이

### 세상을 바꾸는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

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 
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 
'공익신고자 보호법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 
그리고 불의에 맞선 신고자를 좀 더 빈틈없이  
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 
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됩니다.  
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증충해진  
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을 소개합니다.

### 공익신고자 보호법

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?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 
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입니다. 공  
익신고는 국민의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 이익, 공정한 경쟁 등을 침  
해하는 행위를 신고·제보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, 누  
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, 신고로  
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·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, 신변  
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+ 신고방법

상담번호 국민 없이 **110** 또는 **1398**  
온라인 신고 청령포털 부패공익신고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  
방문,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
정부세종청사 7층 국민권익위원회  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
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
더 탄탄하고 든든해진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기존 284개 공익침해  
행위 대상 법률에 '성폭력처벌법', '병역법', '아동학대처벌법' 등  
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 행위 182개가 새로 추가됩니다. 이  
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로 올해 11월 20일부터 본  
격 시행됩니다.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'공익신고자 보호  
법'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 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공익신고  
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그동안 사라지다시피 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 
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기존 법률 284개  
개정 이후 **467**개 (신규 추가 182개)

\* 기존 284개 중 삭제된 법률 3개, 분법된 법률 4개.  
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이 더해져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입니다.

### 추가되는 공익침해행위 TOP 5

- +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 
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
- + 아동학대로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+ 본사에서 대리점에 상품·용역 구입을 강제하거나  
판매목표를 제시·강제하는 행위
- +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
- +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,  
촬영물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행위 등



### 안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

### + 비밀보장

공익신고자·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 
있는 사실 공개 금지

### + 비밀명 대리신고 제도

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 
변호사 이름으로 신고, 자료 제출, 의견진술 등을 진행하는 제도

### + 불이익조치 금지

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 
신분상·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

### +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

- 해고,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 
보호조치 신청 →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
불이익 조치자에게 원상회복 등 요구  
※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 
(매년 2회, 1회 최대 3천만 원) 부과

### + 신변 보호

-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 
- 참고인 또는 종인 출석, 귀가 시 동행  
-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
대상자 추가 추가적 순찰 등의 보호를 받음  
※ 공익신고자·협조자뿐 아니라 그 친족 또는  
동거인의 신변도 보호 가능

### + 형법, 징계·불리한 행정처분 감경, 면제

- 형의 감경, 면제  
-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, 면제  
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
-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

### + 신고방해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

-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,  
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
-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하면  
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여

